통일비용 · 통일편익

개 관

o 2010년 8.15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을 우리사회에서 폭넓게 논의해주기를 제안한 이후,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의 규모 및 바람직한 통일재원 조달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된 바 있음.

- 통일세는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주요검토 과제로서, 단순한 세금 징수의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 통일준비와 과정, 재원을 종합적으로 논의해나가는 출발점으로서,
- 통일에 대비해 투입될 재원의 조달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해보자는 의미였음.

o 통일재원 조달방안 논의과정에서 과거에 통일유보론 또는 지연론의 근거로 작용한 통일비용론에 대한 재검토와 통일편익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음. 통일비용보다 통일편익이 중·장기적으로 더 큰 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단비용, 통일비용, 통일편익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가 필요함.

- 과거 독일통일 초창기에 예상보다 엄청난 통일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한국에 소개되면서, 우리의 경우 통일이 되면 막대한 통일비용 때문에 재앙이 올수 있으므로 통일은 남북한의 경제격차를 줄인 후에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으로 자리 잡았음. 그 결과 통일유보 또는 통일회피 생각 등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됨.
- 그러나 독일 통일비용과 그동안 전문가들이 산정한 한반도 통일비용의 규모는 과대 계상되거나 과잉 해석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또한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훨씬 크며, 통일이 되더라도 일정기간 통일비용이 소요되지만 중·장기적으로 통일편익이 더 큰 바, 통일비용만 강조하고 통일편익을 고려치 않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봄.
- 그리고 통일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일준비를 철저히 해나간다면 통일비용은 우리의 국력수준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통일은 오히려 우리에게 통일비용보다 더 큰 엄청난 편익을 줌.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nstitute for Korean Integration of Society

쟁 점 1. : 통일재원 조달방안

o 통일재원 적립 필요성 여부

- 적립 반대 의견 :

▲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강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 과제이며, ▲ 재정 효율성 차원에서 비효율적이며, ▲ 시급한 현안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것임. ▲ 재정 건전성을 회복·유지하는 것이 통일 후 재정을 통한 재원 조달의 용이성을 더욱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임.

- 적립 찬성 의견 :

▲ 적립 규모는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성하면 되며, ▲ 적립재원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공공투자에 활용하는 등 국가경제 운용의 틀 속에서 통합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임, ▲ 장래위기에 미리 대비하는 체제를 갖춤으로서 국가신인도 제고 등 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임 ▲ 통일직후 소요재원이 급격히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적립기금 조성과 같이 사전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견해임.

o 적립시기의 적절성 여부

- 현재 상황 부적절 의견 :

▲ 통일준비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남북관계 상황, 감세기조 등 시기상 부적절함.

- 현재부터 준비 의견 :

▲ 통일은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간 투자이므로 지금 당장의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님, ▲ 어려운 때 일수록 미래대비가 필요함.

o 통일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 정부재원과 민간재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 정부재원의 방법은 어느 것이 타당한지?
- 국내조달만 할 것이 아니라 대외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nstitute for Korean Integration of Society

쟁 점 2. : 통일비용, 통일편익

o 통일비용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도록 규모가 크며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는가?, 따라서 통일은 가능한 남북간 경제격차를 줄여 우리의 경제부담이 줄어들 때까지 늦추어야하는가?

o 통일비용이 왜 엄청나게 산정되었는가? (독일사례, 전문가들 산정결과) 기존의 통일비용 산정에 오류는 없는가?

o 통일편익은 정말로 통일비용보다 큰 것인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통일비용과 비교가능 한가?

o 구체적으로 통일비용의 내역은? 통일편익의 내역은?

기본방향 1. : 통일재원 조달방안

o 통일재원의 적립 의미는

- 국가적 차원 : 통일준비는 국가적 책무로서 7천만 민족과 국가의 미래 준비 차원이며
- 실질적 차원: 통일초기 긴급한 국가재정 소요 대비하여 미리 적립하여, 적립된 재원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통합과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 심리적 차원: 우리국민, 북한주민, 국제사회에 주는 signal effect가 큼

o 통일 초기단계에 긴급히 소요되는 비용은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전에 적정규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o 정부재원과 국민재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국내와 대외 재원 조달방안을 적절히 배합하면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고, 통일 후 재건을 신속히 할 수 있음.

o 정부재원 조달방안 중 다양한 방안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타당성, 현실성,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면 됨.

o 국민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와 국회의 합의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국민적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국민통합을 유도할 수 있으며 재원조달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음.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nstitute for Korean Integration of Society

기본방향 2. : 통일비용, 통일편익

o 통일비용은 일정기간 소요되는 것이며, 통일편익은 중·장기적으로 영구히 발생하는 것으로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훨씬 크므로 통일은 우리에게 결국 이득을 줄 것임. 또한 통일이 되기 전 발생하는 분단비용은 오히려 통일비용보다 더 큼.

- 분단비용 〉 통일비용 〈 통일편익
- 따라서 통일비용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겠음.

o 또한 그동안 통일비용은 독일방식을 준거해 추계가 많이 되었는데 비용 지출기간, 통합과제의 범위와 수준을 어떻게 정하는냐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총비용개념이 아닌 순비용개념으로 산정하면 그 내용은 전혀 달라짐.

- 과거의 논의되었던 통일비용은 과잉 추계되거나, 확대 해석되어 왔는바 재검토가 필요함

o 따라서 통일비용은 '총통일비용'개념이 아닌 '순통일비용'개념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며, 그 기간도 초기의 5년정도 투입되는 비용을 통일비용으로 보아야하며, 그 이후는 '투자자금' 또는 '신국가건설자금'으로 보아야 함.

독일 사례

o 독일의 경우 통일재원은 ▲ 공채 발행, ▲ 세금 인상, ▲ 사회보험료 인상, ▲ 연금보험, 실업보험, 건강보험 등 기금의 활용, ▲ 정부예산의 절약, ▲ 주 정부간 재정 조정, ▲ 공기업 민영화, ▲ 공공재산 매각, ▲ 유럽연합의 지원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조달되었음.

- 처음에는 공채 발행 위주로 하다가 증세로 전환했음. 세금 인상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7.5% 부과하고, 부가가치세를 14% → 15%, 보험세 3%→ 15%, 재산세 0.5% → 1.0%로 하고, 이자 소득세를 신설(30%)하였음. 석유세로 무연휘발유 1리터 22페니히 → 82 페니히, 담배세 가치당 1 페니히를 부과했음.
- 처음에는 90년 - 94년간 독일통일기금 1,607억 DM을 조성(공채, 연방 및 주 정부 예산으로 조달)하여 사용했으나, 더 투입비용이 필요해 제1차 연대협약(95년 - 04년)에 의해 매년 206억 DM이 신연방주로 이전되고,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nstitute for Korean Integration of Society

제2차 연대협약(05년 - 19년)에 의해 1,565억 유로를 신연방주로 이전하기로 하였음.

o 연방정부나 구 서독주 정부에서 신연방주(구 동독지역)로 투입한 금액 개념인 통일비용은 주로 베를린자유대학이나 할레경제연구소(할레경제연구소가 자유베를린대학보다 적게 산정)에서 산정했는데, 1990년 - 2010년간 총 2조 700억유로가 투입된 것으로 추정됨.

- 그 구성내역은 사회복지비용이 거의 과반을 넘는 1조 1,000억 유로, 경제지원이 1,400억 유로, 인프라구축이 2,000억 유로, 사용목적이 특정되지 않는 지원(독일통일기금,통일연대기금, 신탁관리청 적자 등)이 4,600억 유로, 기타 지원금(수리 및 재건기금, 소련군 철수지원금 등)이 1,700억 유로임.
- 그러나 상기 비용은 '총통일비용'개념으로서 구동독지역이 연방정부에 납부한 세금과 사회보장기금 등을 제외한 금액인 '순통일비용' 개념으로 계산하면 훨씬 줄어들 수 있음. 또한 통일비용에서 통일편익을 뺀 금액을 순통일비용'으로 정의하면 통일비용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음. 일부 독일관계자들은 통일 초기단계에서 투입되는 주로 소모성 비용만을 통일비용으로 계산해야하며, 일정기간 지난 후에 투입되는 투자성 비용은 '재건자금' 또는 '신국가건설 자금'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한국통일시 통일비용 추계 사례(부록 1)

o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소요되는 통일비용 추정치는 연구자 및 발표기관에 따라 적게는 2,000억 달러 수준에서 많게는 수조 달러 수준 까지 편차가 매우 큼. 이것은 통일비용의 개념, 통일의 시기와 방법(점진적이냐? 급진적이냐?), 목표소득의 수준과 비용지출기간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큰 편차가 발생함.
- 대체로 통일비용 구성내역은 위기관리비용, 제도통합비용, 경제발전 비용, 사회복지 비용이며, 학자 및 기관에 따라 그 구성내역이 다름.
  산출 기간은 대체로 10년을 잡으며, 북한의 소득수준 목표를 남한의 60-80%로 잡고 있음.

o 기존의 통일비용 추계방법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다섯 가지 정도로 접근방법을 구분해 볼 수 있음.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nstitute for Korean Integration of Society

① 통일이후 지출해야 할 비용요소들을 항목별로 합산, 추계하여 통일비용의 규모를 도출하는 방법(이상만,배진영,박태규)

② 북한지역의 목표소득을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 (이영선, 연하청, Marcus Noland)

③ 북한의 소득수준을 통일 이후 4-5년 이내에 2배로 증가시키는 비용을 통일비용으로 정의하고 접근하는 방법(RAND연구소), 랜드연구소는 북한지역이 남한지역의 소득수준을 따라잡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북한지역의 소득수준 그 자체를 2배로 증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함.

④ 북한의 1인당 GNI가 남한의 절반에 이르는데 필요한 투자지원액을 통일비용으로 정의하고 '소득조정기간'을 가정하는 방법(신창민)

⑤ 서독 GDP 대비 동독지역에 투입하는 비율(4-5%)을 통일한국에 적용하는 방법(박종철)

o 대체로 통일한국의 통일비용 추정치는 독일방식에 많이 근거한 것으로 총통일비용 개념으로 접근하였으며, 그 결과 과다 추계된 측면이 있음. 대체로 10년정도 기간을 두고 통일비용을 추계했는데, 어떤 학자는 30년 기간을 두고 산정한 경우도 있음.

통일한국의 통일편익(부록2,3 참조)

o 통일한국의 통일편익은 유·무형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바 계량화 하기는 힘들며, 그동안 연구결과도 계량화 된 것은 거의 없음.

o 통일한국의 통일편익에 대해서는 조동호, 신창민, 홍익표, 현대경제연구원 등 제시하였음.

- 통일편익은 남한에서 발생하는 편익과 북한에서 발생하는 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고, 또한 경제적 편익과 비경제적 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경제적 편익으로 방위비·외교비 등 분단비용의 해소, 북한지하자원의 확보, 시장의 확대, 규모의 경제, 생산요소의 효율적 배분, 남북지역경제의 유기적 결합, 물류비용의 절감, 해외투자 유치 증대 등 경제통합의 편익을 들 수 있음.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nstitute for Korean Integration of Society

- 비경제적 편익으로는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문제의 해결, 국제적 위상의 제고 및 국가브랜드 가치 증가, 전쟁위험의 감소, 비무장지대 자연생태 관광등 관광·여가·문화서비스 기회 향상 등을 들 수 있음.
-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 군 병력규모와 관련, 남한 병력 약 60만명, 북한병력 약 120만명, 도합 약 180만명의 군 병력규모를 통일시에는 약 50만명 규모(통일연구원)로 감축할 수 있게 되어 약 130만명의 인력을 다른 분야에서 활용, ▲ 우리나라 인구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2018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며, 생산가능인구(16-64세)는 2016년부터 감소할 전망이며, 특히 노동력의 주축인 30-49세 사이의 인구는 이미 200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음. 인구가 줄어들면 계속적인 경제성장 및 발전에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통일이 되어 남한 인구 약 4,900만명, 북한 인구 약 2,400만명, 그리고 해외동포 약 700만-800만명이 합쳐져서 약 8,000만명으로 통합되면 인구감소문제를 해결, ▲ 북한의 지하자원의 잠재가치는 6,983조원인 데 비해 우리는 289조원에 불과함. 우리는 대부분의 자원을 외국으로 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통일이 되면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이용하여 자원문제를 많이 해소, ▲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무역시 해상을 통해야하는데, 부산항에서 유럽으로 가는데 해상운송은 약 한달이 걸리는데 반해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를 통과하는 철도를 이용하면 약 18일이 걸리고 수공비용은 철도를 이용하면 약 절반정도 절감, ▲ 개성공단처럼 우리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하면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고 남북간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결합, ▲ 또한 국토의 확대와 종합적 견지 에서 국토를 효과적으로 이용 등을 들 수 있음. 결국 통일이 되면 인구 약 8,000만명의 중견국가로서 국부가 증대되는 선진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됨.

통일재원 조달 방안

o 통일재원조달방안에는 △ 목적세 신설(가칭 통일세), △ 부가가치세율 인상, △ 남북협력기금의 확충(통일계정 신설), △ 공공요금 인상, △ 타 기금으로부터의 적립, △ 국채 발행, △ 복권 발행, △ 민간투자 활용, △ 차관,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지원 등 해외부문 조달 △ 예산절감 △ 국가재산 매각 등을 검토할 수 있음.

o 통일편익이 후세대에 나타나므로 논리적으로 국채발행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 국민 모두가 부담에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세금징수방안을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nstitute for Korean Integration of Society

생각할 수 있으나 조세저항이 예상됨. 해외부문 조달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함. 종합적으로 생각컨대 한 가지 방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 비용분산과 세대간 형평성 고려(통일의 수혜자는 모든 국민 그리고 현재 및 미래 세대), ▲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직접세와 간접세의 적절한 배분), ▲ 수익자 부담의 원칙 설정(민간의 역할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조달방안을 적절히 배합할 필요가 있음.

o 통일이 가시화되지 않은 시점에 당장 대규모의 통일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재정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으나,

- 통일을 대비하여 통일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통일준비재원 마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공론화는 필요하다고 봄.
- 그리고 재정운용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탄력적 운용을 한다는 전제로 일정수준(상징적)의 통일기금의 적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봄. 현 시스템상 재원조달의 편의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에 통일계정을 별도 신설해,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의 적립이나 매년 일정금액의 통일계정 적립을 생각할 수 있음. 후세대가 통일편익을 향유한다는 측면에서 일정규모의 국채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또한 국민 모두가 동참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세원을 포착하여 세금을 상징적으로 거둘 필요도 있음. 민간투자나 해외자본 조달도 강구해야 함. 남북관계상황, 국민여론 등을 고려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민간차원의 통일기금 조성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것도 필요함.
- 통일시 필요한 장기간의 통일비용을 미리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바, 통일시 초기 단계에 긴급히 소요되는 비용 규모정도(2030년 통일가정시 초기 1년동안 최소 55조, 최대277조 소요, 통일재원마련방안 최종보고서)는 통일 이전에 미리 준비하여 적립하는 것은 기 설명한 대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바, 지금부터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쳐 적립할 필요가 있음.

o 통일비용 재원마련 방안 강구 못지않게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와 이를 고려한 통일이후 단계적 통합대책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nstitute for Korean Integration of Society

[부록1] 기존 통일비용 추정 사례

○ 통일비용 추정은 통일의 형태와 방법, 시기와 목표수준, 추정방법 등에 따라 최소 500억~5조 달러로 큰 편차가 존재

(단위 : 달러)

연구자·기관 (발표 연도)	통일시점 (기간)	통일비용	추정방법 및 기준
신창민(2007)	2015~30 (10년)	8,577억~1조 3,227억 달러 (GDP 대비 6.6~6.9%)	목표소득 방식
BOK(2007)	–	5,000억~9,000억 달러	목표소득 방식
조세硏(2008)	2011	통일후 10년간 매년 남한 GDP 7~12%	–
피터벡(2010)	–	30년간 2조~5조 달러(남한의 80%)	목표소득방식
미래기획위원회 (2010)	2011	점진적: 3,220억 달러 급진적: 2조 1,400억 달러	–
찰스울프(2010)		620~1조 7,000억 달러 (현재 북한GDP 700달러→남한 수준 2만 달러로 향상)	목표소득방식
전경련(2010)	–	3,500조원	전문가설문조사
김유찬(2010)	2010	1,548.3~2,257.2조 원 (통일후 20년 비용)	항목별 추정방식 (위기관리+SOC)
현대경제硏(2010)	2010 (10~18년)	1인당 3,000 달러: 1,570억 달러 1인당 7,000 달러: 4,710억 달러 1인당 10,000 달러: 7,065억 달러	목표소득 방식 (한계자본계수)
통일부 용역과제(2011)	2020 (20년)	379.2조~1,261.1조 원 (2030년 1인당 GDP 남한의 20%)	항목별 추정방식 목표 소득 방식 (통일후 10년간 포함)
	2030 (30년)	813조~2,836조원 (2040년 1인당 GDP, 남한의 36%)	
	2040 (40년)	1,000.4조~3,277.6조 원 (2050년 1인당 GDP, 남한의 40%)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nstitute for Korean Integration of Society

연구자·기관 (발표 연도)	통일시점 (기간)	통일비용	추정방법 및 기준
KDI (1991)	2000	점진적 통일: 2,102억 달러 급진적 통일: 3,121억 달러	–
KDI(1994)	2000	9,800억~1조 달러	목표소득 방식
한국산업은행 (1994)	1994~2000	1조 5,463억 달러(100%) 8,050억 달러(60%)	목표소득 방식 (소득격차 해소)
이상만(1993)	2000	10년간 2,000억 달러	독일과 비교
민족통일연구원 (1996)	2000~10	3,600억 달러(외자 1,800억 달러) - 남한의 60% 수준	목표소득 방식 항목별 추정방식
김덕영 (국방대학원)	10년간	2,700억 달러(급진 통일) 1,300억 달러(점진 통일)	정부 투자 비용
황의각 (1996)	2000~05	1조 2,040억 달러 (남한과 동일 생활 수준 달성)	목표소득 방식
마커스놀랜드 (1996)	2000	4,150억 달러(1990), 9,830억 달러 (1995), 2조 2,420억 달러 (남한의 60% 수준 달성)	목표소득 방식 (CGE 모형)
Manfred Wegner(1996)	2000~25	6,100억 달러 (통일후 5년간 지원 금액)	항목별 추정방식
박태규 (1997)	1995~2005	통일후 1~5년: 남한GNP 8.7%~11.3% 통일후 6~10년: 남한 GNP 7.5%	항목별추정방식 (위기관리비용 + 경제투자비용)
조동호(1997)	1995	1996~2020년 : 143.1~221.3조 원	항목별 추정방식 (SOC 투자비)
고일동	2001~10	4,600억 달러 (초기 5년간 2,800억 달러)	남한의 순재정 부담액
Economist(1997)	2000	2,400억 달러(남한의 60% 달성)	목표소득 방식
신동천·윤덕룡 (1998)	–	887억~2,808억 달러	목표소득 방식
골드만삭스 (2000)	2000~10 2005~15	8,300억~2조 5,400억 달러 1조 700억~3조 5,500억 달러	목표소득 방식 (남한 60%)
박석삼(2003)		점진적 통일: 8,300억 달러 급진적 통일: 3,121억 달러	항목별 추정방식 (위기관리비용)
이영선(2003)	5~11년간	점진적 통일: 732억 달러 급진적 통일: 1,827~5,614억 달러 (남한 60% 달성에 10년 소요 가정)	항목별 추정방식 (위기관리비용 중심)
SERI(2005)	2015	546조원 (최저생계비, 산업화 지원)	항목별추정 방식
랜드硏(2005)	–	500억~6,670억 달러 (통일후 4~5년내 2배 수준 향상)	목표소득 방식

자료 : 홍순직, 『남북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 2012 국정감사 대비 정책토론회, 2012.9.26.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nstitute for Korean Integration of Society

[부록 2] 조동호 교수가 제시한 통일편익의 분류

통일편익

Ⅰ. 남한지역의 경제적 통일편익

분단비용의 해소

① 방위비
- 국방비 지출의 감소
- 국방인력의 축소

② 외교비
- 공관의 중복유지비용 축소
- 외교적 경쟁비용의 소멸

③ 이념 및 체제유지비
- 이념교육, 홍보비용의 소멸
- 대북관련기관 유지비용 소멸

④ 행정부문의 고정비용 절감

경제통합의 편익

① 규모의 경제
- 시장의 확대

② 남북한지역경제의 유기적 결합
-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
- 국토이용, 환경보전의 효율성 증대
- 중국, 러시아 등과의 교역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

Ⅱ.북한지역의 경제적 통일편익

분단비용의 해소

① 방위비
- 남한지역 경우와 동일
- 군사용 비축미의 민간이용

② 외교비
- 남한지역 경우와 동일

③ 이념 및 체제유지비
- 남한지역 경우와 동일
- 대남관련기관 유지비용 소멸

④ 행정부문의 고정비용 절감

⑤ 왜곡된 산업구조 조정
- 군수산업 비중 축소

경제통합의 편익

① 경제체제전환
- 사유제에 의한 근로·투자유인 증대
- 생산요소의 효율적 배분
- 해외투자유치증대 및 국제신용도 향상

② 규모의 경제
- 남한지역 경우와 동일

③ 남북한지역경제의 유기적 결합
- 남한지역 경우와 동일
- 기술혁신, 생산성 제고

Ⅲ. 비경제적 통일편익

① 인도적 편익
-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 남북한지역의 민주화 촉진
- 북한지역주민의 인권·자유 신장

② 정치적 편익
- 국제적 위상 제고
- 전쟁위험의 해소

③ 문화적 편익
- 학술·문화 발전
- 관광·여가·문화서비스 기회향상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nstitute for Korean Integration of Society

[부록 3] 신창민 명예교수가 제시한 통일편익

통일에 따르는 통일편익의 종류 (1)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1. 소득조정기간동안 군비지출을 감소시키고 그에 대체하여 매년 GDP 2% 규모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생산재, 소비재를 증산하고, 그 기간 이후에도 그보다는 적더라도 상당한 생산량 증가를 얻을 수 있음.

2. 남측 군 병력 감축으로 10년 조정기간동안 매년 GDP 2.65% 규모를 증산시킬 수 있으며, 그 기간 이후에도 그보다는 적더라도 역시 상당한 생산량 증가를 얻을 수 있음.

3. 남측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금강산 관광에 드는 비용이 턱없이 비싼 이유가 남북 분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소요되는 이상의 추가적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인데, 여기에 현금으로 직접 지출되는 웃돈이 역시 분단에 따르는 비용임.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이 제거됨.

4. 금강산은 명시적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관광이 가능하지만, 백두산 등 북측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명승지는 가 볼 수조차 없다. 이러한 관광자원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만족도를 통일과 함께 다시 얻을 수 있음.

5. 서울에서 중국 길림성이나 흑룡강성 방면으로는 직선 비행을 하지 못하고 대련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추가되는 비용이 들게 되는데, 통일은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함.

6. 분단으로 인하여 일그러졌던 남북한의 금수강산의 많은 곳이 모두 본래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오게 됨으로, 그 속에서 우리들의 생활이 그만큼쾌적해지고, 훌륭한 관광자원들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됨.

7. 남북의 경제권역이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해 기회를 잃었던 규모의 경제 (Economics of Scale)로부터 오는 이득을 얻을 수 있음.

8. 각종 과학기술의 보완적인 이점을 살릴 수 있게 됨. 기초과학 가운데 북측에 상대적으로 강한 분야가 있다면, 이를 남측의 시장성 관련 노하우와 배합시킬 때 서로 이득을 볼 수 있게 됨.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nstitute for Korean Integration of Society

9. 전쟁이나 무력분쟁의 우려가 불식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직접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국내 고용이 창출되고 GDP가 증가함.

10.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지불하던 이자부담이 감소함.

11. 이산가족들이 한을 풀고, 분단의 아픔을 해소하게 됨.

12.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남북 간의 크고 작은 무력충돌이 사라짐으로써, 이에 따르는 인명살상의 불행과 손실이 없어짐.

13.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 여파로 평시 생활 속에도 부지불식간에 배어있는 긴장감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평화 속에서 실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음.

14. 국방, 안보 문제 때문에 수시로 나타나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불필요한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 특히 사실상 정권 유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국민들에 대한 억압의 빌미가 사라지게 됨.

통일편익 종류 (2)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15. 북측의 생산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Buy Korea" 정책에 따라 10년 동안 매년 남측 GDP의 7%에 육박하는 자본재를 남측에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 이에 따르는 생산효과, 그리고 산업연관효과 등은 실로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우리 경제는 또 한 번 도약하게 될 것임.

16. 조정기간이 끝난 후에도 북측지역에서는 그동안의 자본축적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사실상 계속적으로 자본재 수요가 이어질 것임.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탄탄한 총수요는 남측의 경제활황을 지속시켜 줄 것임.

17. 통일 이후에는 통일한국 인구의 1/3을 차지하게 될 북측 지역의 주민들이 인간 이하의 참혹한 생활로부터, 단숨에 선진국 진입단계에 있는 국가의 국민이 되는 이득을 얻음.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nstitute for Korean Integration of Society

18. 통일을 계기로 토지공개념제도 시행을 북측지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부동산 투기라는 불치병으로부터 벗어나 효율적인 경제발전과 합리적이며 공평한 소득분배의 틀을 얻게 됨.

통일편익의 종류 (3)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19. 통일이 되어 철도, 도로, 항만, 통신 등이 제한없이 연결되면, 통일한국은 해양과 대륙의 가운데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살려내어 대륙으로의 직접 진출이 가능해지고, 물류비용, 교통비용의 절감과 해외시장 확대의 기회를 얻게 됨. 그리하여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게 됨. 역사적으로는 해양과 대륙 사이에 위치한 입지여건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피해가 컸지만, 이제는 이것이 오히려 강점으로 변하여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상황으로 변모하게 됨.

20. 남북 간의 생산자원 보완성을 실현,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음.

21. 북측 지역의 자본조성에 따라 북측의 생산, 소비 수준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 통일로 인해 확대된 시장규모를 배경으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는 분야가 증가할 것임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수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됨.

22. 북측 지역에서는 뒤늦게 개발된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계획적인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이러한 연관 가운데 전국적으로 각 분야에 걸쳐 지역에 따라 조화롭고 바람직한 경제벨트를 형성할 수 있게 됨.

23. 농업 분야에 나타나는 한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황해도, 평안도 등 북측 지역에서 화학비료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토질을 그대로 살려서 순환유기농법 체계를 도입한다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좋고, 인구 밀집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오염되지 않은 질 높은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되어 식생활 향상과 건강에 큰 이득을 얻게 됨.

24. 남측 지역의 경제성장 추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측 지역의 산출량 증가를 통해 규모가 커진 경제력을 형성함.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영토와 인구를 확보하고 확실한 강국의 모습을 갖춤.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nstitute for Korean Integration of Society

25. 통일 후 남북지역 간 분리관리의 결과로 전국적인 경제적 동질성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같은 기간 동안 병행하여 이루어내게 될 제 분야에 있어서의 체계 단일화와 함께, 명실 공히 통일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됨.

26. 통일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면, 통일한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쉽게 넘볼 수 없는 강국이 될 것이고, 국제외교적인 차원에서 아무도 쉽게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될 것임.

27. 통일한국은 진정한 독립국가로서의 훌륭한 위상과 민족자존의 영광을 갖게 될 것임.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nstitute for Korean Integration of Society

[부록 4] 홍순직 박사가 추정한 통일편익

1. 통일편익의 추정

○ (개요) 경제적·비경제적 통일편익 중 경제적 편익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경제적 편익 중에서도 대북 투자를 통한 **경기활성화 효과**와 **통일로 인한 절감 효과**를 구분하여 추정

- 우선 통일비용의 대북 투자로 남한이 얻게 되는 경기활성화 효과를 목표소득 방식으로 추정함으로써 통일비용과 편익 추정 방법의 일관성 유지
  - ·대북 투자를 통한 남한의 경기활성화 효과는 국민총소득(GDP)에 상당 부분 반영되므로, 통일비용 투자에 따르는 **남한 산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산업연관표를 통해 추정**

- 다만, 이는 투자에 따른 생산증대(부가가치) 효과만을 고려하므로 **통일에 따른 절감효과**를 통해 보완하며, 이는 **국방비 감축 효과와 국가위험도 감소 효과를** 항목별로 추정하여 합산
  - ·특히, 국가위험도 감소 효과는 외채상환이자 부담 절감액을 통해 추정하며, 이는 통일 이후 리스크 프리미엄 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데 근거함

< HRI 통일편익 추정방법 개요 >

구분	내 용
추정 방법	- 목표소득 방식을 주로 하되, 항목별 추정방식을 추가하여 보완
편익의 정의	- 통일후 북한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비용을 투자할 경우 남한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생산 효과에 국방비 절감액과 국가위험도 감소 효과를 추가 ·**통일편익 = 남한 산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 남한의 국방비 절감액 + 국가위험도 감소 효과**
계산 방법	**- 부가가치 유발효과 :** 통일비용 × 부가가치 유발계수 **- 국방비 절감액 :** 국방비(현재수준)－국방비(독일 감축비율 적용) ※ 독일의 경우, 통일전 서독의 국방비는 GDP 대비 2.5%였으며, 통일 이후 10년간 1.5%수준으로 감소 **- 국가 위험도 감소 효과 :** 대외채무액 × 리스크 프리미엄 ※ 선진국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약 80～100bp이며, 한국은 100～120bp로 선진국에 비해 약 20bp 높은 수준
주요 가정	- 국방비는 통일 독일의 경우와 같은 수준(1.5%)으로 감축 -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은 통일후 10년만에 3,000달러 도달 - 대북 투자시 원자재와 기술인력은 대부분 남한에서 조달 - GDP 대비 외채 비율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 -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해외조달금리가 약 20bp 인하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nstitute for Korean Integration of Society

o (추정 방법) 통일비용 투자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독일 국방비 감축 비율을 적용한 **국방비 절감액**, 그리고 **국가위험도 감소**에 따른 외채상환이자 부담 경감액을 추정하여 합산

① **부가가치 유발효과** :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통일비용의 투자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

- 북한 주민 1인당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투자비용이 남한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
- 2008년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666이며, 앞서 추정한 통일비용을 곱하여 통일비용의 북한 투자시 남한 산업에 발생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추정
- 다만, 남한의 산업연관표를 북한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실제 경제적 효과는 20%포인트 절하된 값으로 조정

부가가치 유발효과 = [대북 경제적 투자비용 × 부가가치유발계수] × 실제 경제적 효과(80%)

② **국방비 절감 효과** : 남한이 현재 국방비 수준을 유지할 경우와 통일 이후 감축될 경우와의 차이를 추정

- 통일전 GDP 대비 국방비는 서독이 2.5%였으며 통일 10년 후 전체 독일의 GDP 대비 1.5% 수준으로 감축
- 2009년 현재 남한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2.8%이며, 이 비율이 유지될 경우 국방비와 통일 이후 독일 수준으로 감축될 경우의 국방비의 차액을 연도별로 추정하여 합산

국방비 절감 효과 = Σ (분단 유지시 연도별 국방비 − 통일후 국방비) ※ 분단시 국방비는 현재 남북한의 GDP대비 국방비 비율(남한: 2.8%)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정한 액수임 ※ 통일후 국방비는 남한의 국방비가 10년에 걸쳐 GDP 대비 1.5%에 이르도록 감축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추정된 액수임

주 : 남한의 향후 GDP추정치는 골드만삭스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2009)의 추정 자료 이용

③ **국가위험도 감소 효과** : 통일 이후 국가위험도 감소에 따르는 외채 상환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추정

- 2010년 10월 현재 한국의 GDP대비 외채 비율은 4.44%로 추정되며, 이 비율이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nstitute for Korean Integration of Society

통일 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지정학적 리스크 제거로 선진국 수준으로 해외차입 금리가 인하될 경우, 현재보다 약 20bp(0.2% 포인트) 절감 효과 발생

· 2010년 현재 선진국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80~100bp이며, 남한의 경우는 100~120bp임

국가위험도 감소 효과 = Σ(연도별 GDP대비 외채규모) × 외채상환금리 인하 효과(0.2%)

④ **기타 편익** : 남북 공동의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편익

- 개성공단 등 북한 인력 고용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

· 2010년 현재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월 평균급여는 90.5달러로서 한국의 도시근로자 평균 월급인 2,060달러(230만원)와 비교할 때 약 23배의 차이

· 통일 이후 북한 근로자의 고용 증대로 제조업과 기타 노동집약 산업의 생산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

- 내수 시장 확대는 물론, 남한의 노령화 · 저출산을 보완

· 세계 경제 부진 전망 속에, 통일이 되면 인구 약 7,500만 명의 내수 시장이 형성됨으로써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남한의 신성장 동력 확보

· 2030년에는 세계 21위의 인구 강국(7,650만 명)으로의 부상과 생산가능 인구(15~64세) 증가로 남한의 노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완화 : 2030년 남한의 생산가능 인구는 3,147만 명(인구 구성비 62.5%)이나, 통일한국에는 4,931만 명(同 64.5%)으로 증가

- 북한 내 관광 자원의 활용 및 개발을 통한 관광 수입 증대 효과

· 금강산, 개성 등 기존 관광지역을 활성화하고 백두산, 묘향산 등을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함으로써 관광 수입이 증대

· 또한 비무장지대(DMZ)에 생태 · 평화 공원 및 세계적인 관광 명소를 조성함으로써 관광 수익의 증대가 예상

- 북한 지하자원의 개발을 통한 해외 자원의 수입 대체 효과

· 북한자원연구소(2012. 8. 26)에 의하면,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 18개 광물의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nstitute for Korean Integration of Society

잠재가치는 상반기 시장 가격 기준으로 1경 1,026조 원(9조 7,574억6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광물자원공사(2010. 12)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지하자원의 잠재적 가치는 약 7,000조원으로 평가되며, 200여종의 광물자원 가운데 경제성이 기대되는 광종은 20여종에 이름
- 특히, 철광석, 석탄 등 주요 광물 자원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매장량을 자랑하는 마그네사이트 및 희토류인 마그네슘, 티타늄 등의 개발로 연간 150억 달러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

- 남북을 연결하는 각종 교통 인프라의 개발로 인한 물류비 절감 효과

- 남북한 교통망(TKR)은 물론, TCR(중국), TSR(러시아), TMR(만주), TMGR(몽골) 등 북방 지역으로의 교통망이 연결됨으로써 물류비 절감
- 통일 이후 한반도는 대륙(중국, 러시아)과 해양(일본, 미국, 동남아시아)를 잇는 동북아 물류 허브로 성장하게 될 전망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nstitute for Korean Integration of Society

[부록 5] 남·북한 주요광종 매장량 및 잠재가치 비교

* 2010년 기준

구분	광종	품위(%)	단위	매장량		잠재가치(억원)	
				북한	남한	북한	남한
금속	금	금속기준	톤	2,000.0	42.7	613,274	13,093
	은	금속기준	톤	5,000.0	1,349.8	19,124	5,162
	동	금속기준	천톤	2,900.0	51.0	92,791	1,631
	연	금속기준	천톤	10,600.0	372.0	110,913	3,892
	아연	금속기준	천톤	21,100.0	557.9	260,680	6,892
	철	Fe 50%	억톤	5,000.0	37.3	3,045,300	22,717
	중석	WO_3 65%	천톤	246.0	128.6	406	212
	몰리브덴	MoS_2 90%	천톤	54.0	24.2	16,669	7,470
	망간	Mn 40%	천톤	300.0	176.4	1,864	1,096
	니켈	금속기준	천톤	36.0	-	4,290	-
	소계					**4,165,311**	**62,165**
비금속	인상흑연	FC 100%	천톤	2,000.0	121.6	12,049	732
	석회석	각급	억톤	1,000.0	103.3	11,838,000	1,223,344
	고령토	각급	천톤	2,000.0	110,773.4	349	19,336
	활석	각급	천톤	700.0	11,131.2	840	13,357
	형석	각급	천톤	500.0	477.0	1,256	1,198
	중정석	각급	천톤	2,100.0	842.1	3,415	1,369
	인회석	각급	억톤	1.5	-	388,326	-
	마그네사이트	MgO 45%	억톤	60.0	-	26,797,320	-
	소계					**39,041,555**	**1,259,336**
석탄	무연탄	각급	억톤	45.0	13.6	5,194,350	1,569,848
	갈 탄	각급	억톤	160.0	-	21,434,720	-
	소계					**26,629,070**	**1,569,848**
합 계						**69,835,936**	**2,891,349**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nstitute for Korean Integration of Society